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

강력한 정책의지, 「개방극복」 자신감 확산

지난해 6월 14일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이 확정 발표된 이후 한해동안 우리 농업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면 우리 농업은 설 땅이 없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 대신에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농어민들 사이에 확산돼가고 있는 점이 한해동안의 가장 큰 변화로 꼽을 수 있다.

이는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이 확정된 이후 정부가 계속 추진해 온 일련의 농정개혁을 통해 정부의 농촌희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농어민들이 피부로 실감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나서는 한편 농어민 스스로가 영농의욕을 새로 가다듬고 수입개방의 파고를 이기기 위한 지구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 1년을 맞은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의 부분별 성과를 점검해본다.

● 장애농업인력 육성

21세기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갈 장애농업인력의 육성은 정부가 야심적으로 내놓은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의 10대 핵심과제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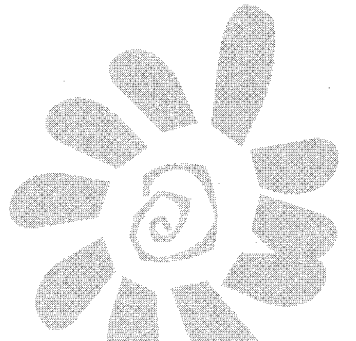
올해부터 매년 1만5천명씩 오는 2004년까지 15만명의 가족단위 전업농 육성과 10만명의 농어업인 후계자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농수산 전문경영인력 육성방안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올해 1만4백76명의 농어민후계자와 1만5천5백83명의 분야별 전업농을 선정했다.

전업농에게는 5천만원의 자금이, 농어민후계자에게는 1인당 2천만원까지 영농자금이 지원되나 후계자의 경우 사업내용에 따라 3천만원까지 지원되기도 한다.

또 경영규모나 시설장비, 경영능력에 있어 가장 앞서가는 전업농을 선도농가로 지정하는 것은 올해 70명을 선발하는데 이어 2004년까지 모두 9백70명을 선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농업분야 3개, 수산 및 임업분야 각각 1개씩 모두 5개의 농림수산 전문기술대학이 설립돼 장애농어업인 육성의 산실 역할을 하게 된다.

● 농기계 반값공급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시행 3년째를 맞는 농기계반값공급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41만3천대의 농기계가 농가에 공급돼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4분의 1정도인 41만 가구가 혜택을 입었다. 농기계구입비 한도액 2백만원 이내에서 50%가 국고보조



로, 2백만원을 초과하는 농기계는 1백만원이 보조되는 농기계반값공급 시책은 특히 공급대상에서 탈락된 농가에 대해서도 농기계 가격의 90%까지 저리의 자금이 지원돼 거의 모든 농가가 농기계 구입에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 정부는 올해도 모두 8천1백86억원의 자금을 들여 21만 3천대의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할 방침인데 이로인해 7백96개의 농기계공동이용조직과 1만가구의 농가가 추가로 혜택을 입게될 전망이다.

●농산물 유통개혁

농산물 유통의 시작인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채소작목반과 양파조합등과 같은 전문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농산물 포장센터를 올해안에 21개소, 청과물 종합처리장은 3개소를 건립한다.

또 농산물의 분산기능 확충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10개소를 조기완공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전품목 상장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정도매법인의 상장수수료도 6%에서 4.5%로 인하돼 농어민의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이외함께 대도시 유통권 중심의 물류센터 건설과 농협 자회사인 농협유통의 설립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유통망이 형성돼 농민들이 농산물 출하처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농정집행방식 혁신

농어업인의 창의와 자조역량을 극대화하고 지방화시대에 맞춰 지방농정조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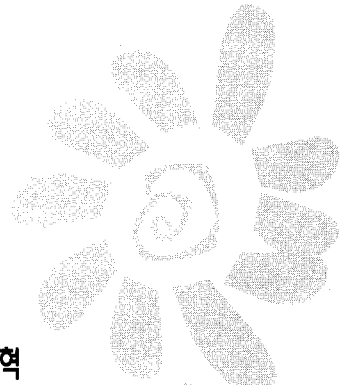
활성화 및 투자효율의 제고를 위해 지난해말 확정된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은 열린농정·자율농정·상향식농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농정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합실시요령에 따라 농어촌발전대책 2백75개 사업의 투융자계획과 지원조건, 사업별 신청자격 등이 모두 공개돼 농어민이 스스로 사업을 선택해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농어촌 지원사업이 농어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농어촌발전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농어민 불편해소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불편 부담해소를 위해 정부는 농림수산분야에서 모두 4백16건의 과제를 선정해 올해 3월말현재까지 3백5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거나 추진중에 있다. 조치가 완료된 농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내용은 우선농지개량 목적의 농지 일시전용 허가권이 시장·군수에 게 위임됐고 허가시기도 농한기에서 연중으로 사실상 폐지됐다.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농어업용 시설을 할 경우 7천 m²까지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른 농지 조성비와 전용부담금도 감면됐다. 축사도 1백 20평까지는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해져 축사 1당당 3백만원 정도의 설계비를



경감할 수 있게 됐으며 농협 석유판매취급소에서도 유류이동판매가 가능해져 노력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비료의 경우 종전 25kg들이 포장에서 20kg으로 소포장 공급이 실시돼 고령자와 부녀자들이 농사일에 힘을 덜게 됐으며 과수·윈예농가가 미작농가와 똑같이 부담하던 농조조합비는 50%이하로 경감됐다.

● 농어촌학생 대입특례

내년도 대학입시때부터 읍면지역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거주한 사람에 한해 대입 총정원의 2%, 학과별 정원의 10%내에서 정원의 특별전형이 가능해진다.

이로인해 읍면지역 고등학생의 9.2%에 해당하는 연간 1만1천명의 농어촌학생이 혜택을 볼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농어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정책자금 대출개선

정책자금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폐지됐으며 신용대출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1천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농어민후계자에 지원되는 자금이나 농기계구입자금,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등은 대출한도와 별도로 신용대출이 가능해졌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업인 신용보증 한도도 개인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 농지제도 개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조합·농업회사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농지소유상한은 폐지하고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처분하지 않을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등 농지가 농업목적으로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 농어촌발전법령 정비

농협법과 농지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어촌정비법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발전대책을 뒷받침할 17개 법률을 비롯해 양곡관리법과 축산법·종묘관리법·주요 농작물관리법 등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관리에 필요한 11개 법률등 모두 28개 법률을 제·개정해 양적으로 농정사상 가장 많은 법률을 정비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 농어촌의료보험제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농어촌민간병원을 지역중심의 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소등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대폭 보강하는 한편 농어촌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의료비와 고액진료비는 직장 및 지역조합이 공동 부담해 농어촌보험료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주민의 정기건강진단을 올해 5월부터 전면실시한다.

농약정보